

2020. 11. 23. [월] 언론보도

경기신문

2020년 11월 23일 (월)
03면 중합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개성공단 재개 촉구 시위 20일 오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개성공단 재개 위한 경기도의 힘겨운 노력

최근 경기도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나홀로 노력에 격려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라 달라질 남북관계 위상을 염두에 두고 개성공단 재개 추진,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부지사 집무실 민통선 내 도라산전망대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4년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안보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총 41곳이며, 이들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매출 급락, 부채 증가, 신용 등급 하락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4년을 맞아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이 지난 10일 통일부에 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11일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주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개만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정부가 서둘러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행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도는 평화부지사의 현장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보이는 민통선 내 도라전

망대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조건부 동의를 했던 관할 군부대가 유엔(UN)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자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일 파주 임진각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와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 사회단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응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힘이 모이고 있는 셈이다. 2013년 2016년 두 차례나 운영을 중단한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문재인 정부들어 재개의 희망을 가졌으나 북미 회담의 좌절로 재개의 꿈도 멀어지는 듯했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개성공단 재개의 걸림돌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년 1월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에 벌어질 북미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라도 남북 스스로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개성공단 재개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다.

경기지자체 남북교류사업 잔뜩 벌여봤는데... 응답없는 북

2018정상회담 계기 추진 대부분 제안 반응없고 지원 물자 반송도 코로나로 예산 부족 '제자리걸음'

경기도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남북 교류'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맞물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여러 시·군은 남북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특화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사업 시기를 보면 대부분 최근 2년 안에 만들어졌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지자체들 사이에서 남북이 교류 및 협력하는 사업이 안개를 풀었기 때문이다. 평화 분위기에 힘입은 것이다. 정부 방침이 바뀐 부분도 한몫했다.

남북을 잇는 사업은 예산조 통일부가 허가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실행은 안 됐지만, 지난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과거 우수부 도시 등 공통점을 가진 '개성시와 도시협력 관계 맺기', 통일거리와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연계한 '명화치맥 축제'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시 도시협력의 경우 2018년 6월 민간 인사들을 통해 북측에 제안한 이후 2년 넘게 답변이 깜깜소식이다. 치맥축제 등 행사성 사업도 성사되지 않은 게 남아있다.

고양시도 화백산단 도시의 특성을 살려 선인장 묘목을 북에 판매하고 기술을

전수해주는 사업을 비롯해 '고양-개성 간 자전거 평화 대장정', '질병 공동연구' 등 사업을 세웠으나 협의는 실패했다. 시는 2018년 북에 팔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였다가 반송당하기도 했다.

장단풍-인삼 등을 공동으로 재배하는 '농업협력사업', '파주-해주 간 문화 교류 사업'을 내세운 파주시나, '도시 간 문화-산업교류'를 목표로 시장까지 대외적으로 홍보했던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지방 단위와 남북관계 대역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협의 등 큰 틀의 패배를 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업비·연구비 명목으로 일경 기간 안에 수십-수백억대 규모의 기금을 마

련하는 계획도 코로나19 등 재경악화로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2023년까지 50여원을 모으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매년 5억원씩 적립했고 올해 현재 10억이 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3년 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들은 위원회 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와의 접촉, 다양한 전략구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여진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지방정부 최초 대북 무역행사 반출승인, 태양광 발전시설 등 농업사업 28개 품목에 대한 UN 대북재정면제 승인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의 지방정부 남북교류사업 현황을 보려면 www.wonincheonbo.com